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택 사무총장, 지역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 대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장면.

“불모지→산실로” 남은 과제는

[세계수영대회 D-2년]

기대 효과만큼이나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수영이 생활체육으로는 각광받지만, 세계 수영계에서 한국 수영의 위상이 여전히 높지 않은 데다 불모지에서 갈 길이 멀다. 불모지에서 아시아 수영의 산실로 거듭나기에 세계선수권대회는 더 없는 자릿대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남아야 산들이 겹겹이다. 조직위는 내심 사업비 증액이 고민거리다.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7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사실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광주시가 줄곧 주장해 온 대회 기조인 '시설투자없는 저비용 대회' '저비용 고효율 경제대회'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방향성을 놓고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조세특례법 개정도 과제다. 광주시와 조직위가 조세특례 제한을 풀어달라며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제는 크게 4종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인지세는 면제, 관세는 감면을 추진 중이다.

대처하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치밀하지 않으면 기대효과는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초 올해 세계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가재정 악화로 개최권이 반납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영장이나 동호인이 극히 한정돼 있고, 축구나 야구와 달리 전통적인 비인기 종목이어서 국내·외 스타 마케팅 등을 통한 흥행 전략, 대회 이후 수영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설 재활용 방안 등도 고민거리다. 관광객 수요증가 대비책으로 활용하려던 특급호텔도 대회 개막전 준공이 사실상 불 건너갔고, 대한수영연맹의 파행도 시와 조직위로서는 작은 약재가 되고 있다. 대회 유치과정에서 국제적 망신을 샀던 공문서 위조 파문을 딛고 '수영 광주의 명예를 되찾는 문제도 빠트릴 수 없는 과제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유치하는 문제도 정부와 조직위원회 앞에 놓인, 배접 높은 시험 문항 중 하나다.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해 국제수영연맹(FINA) 코널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은 '현재 FINA가 북한수영연맹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 또한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북한 참가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인호 기자

사업비 증액, 조세특례법 개정, 국회협치 등 관건 흥행 전략, 사후 인프라 확충, 시설재활용도 중요 공문서 위조 딛고 명예회복 관심, 北 참가 시험대

배 증가한 1697억원으로 확정됐지만 1만5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의 성공리에 치르고, 특히 1회성이 아닌 지역 유산(레거시)으로 남기기 위해선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동호인 대회인 마스터즈대회만 보더라도 1만 명의 수영마니아들이 1주일에서 길게는 10일 넘도록 광주에 머물 예정이어서 관광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발전의 더 없는 호기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특례법상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지만, 국회 파행과 여야 대치가 걸림돌이다. 경제효과 2조5500억원, 취업 1만8000명이라는 장밋빛 기대 효과가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와 조직위에 주어진 집이다. 광주시의회 김영남(서구3) 의원은 지난 5월 시정질문을 통해 "소모성 경비만 1600억원에 달할에도 시가 소홀히

조영택 사무총장 “광주정신 알릴 기회”

“대회 준비상황 순조, 북한 선수단 참가 등 현안도 긍정적”

“2019 수영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아시아 문화·스포츠 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과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영택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11일 대회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엄지손을 치켜 들며 “순항 중”이라고 화답한 뒤 광주 대회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저비용 고효율 경제대회를 표방한 가운데 최근 조직과 인력을 재편한데 이어 분야별 세부 준비상황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선수단 참가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조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개막일까지 2년 남았다. 대회 준비 상황은.

“지난해 9월 조직위 사무국이 출범하고, 대회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도 확정됐다. 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 실무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앞으로 2년간은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종목별 경기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개·폐막식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주차, 수송대책도 치밀하게 짜고 있다.”

▶최근 조직과 인력이 확대 개편됐는데.

“조직은 기존 1본부 2부 5팀 35명이던 것이 7월부터 3본부 6부 1담당관 17개팀 100명으로 대폭 증강됐다. 경기운영, 숙박, 수송계획 수립 등 업무량이 급증해 조직 확대는 필수적이다. 증원 인력 중 절반 가량은 광주시로부터 파견받았다. 중앙 부처와 전남도, 체육회 등에서도 인력을 파견받고, 15%는 공채 전문가로 채워진 다.”

▶예산이 유치승인 당시보다 3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정부의 유치승인 당시 예산은 635억원이었는데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 1062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선수촌 운영 등 개최 도시 의무비용이 많고, 하이라이빙 종목 추가에 따른 시설비도 적잖다.”

▶저비용 고효율 정책과 배치되는 건 아닌지.

“인건·이산케임과 대구육상대회 등 대부분의 국제대회가 유치 당시보다 실제 사업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했다. 3배 가량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광주는 대구육상대회 절반 수준의 저비용 대회다. 당초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금액에 비하면 238억원이 감소했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위한 노력은.

“경기장 신설은 억제하고 관람석 규모도 국제수영연맹(FINA)과 협의해 주경기장은 1만 5000석에서 1만1000석, 나머지 경기장은 5000석에서 3000석으로 축소했다. 5개 경기장 중 2곳은 관람석 확충과 리모델링 후 사용하고, 나머지 3



곳은 임시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선수촌도 도심의 노후아파트인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15~25층 높이 25개동, 1600가구가 건립돼 대회 기간 6500여 명을 동시 수용하게 된다.”

▶조세특례법 개정 작업이 과제인데.

“대회 기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해 달라는 것이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인지세는 면제, 대회에 필요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경감해 달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8월 중으로 조세특례법 개정사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선수단 참여 여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FINA 회원국인 만큼 광주대회 참가는 의무이자 권리다.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에서는 북한 여자 다이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FINA에서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참가는) 긍정적이다.”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은.

“전 세계에서 2만5000명 이상의 선수와 가족들이 광주를 찾는다. 대회는 한달 가량 이어진다. 광주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다. 문화행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연도별, 단계별, 지역별, 대회 이전, 대회 기간 중 문화행사로 구분해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중장축제 등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대회에 의미와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9광주대회는 문화·스포츠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지구촌에 알리는 좋은 기회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 광주시,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광주대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신병우 기자



사람중심·생명중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